광주시 조직개편안 처리 '진통' 예상

참여혁신단·사회통합추진단 신설… 대변인실은 축소

시의회 상정… 일부의원 "졸속 개편, 공청회 등 거쳐야"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광주시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상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참여혁신단과 사회통합추진단을 신설해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두는 것을 골자로 해 현재 9관 4담당관 39과 214담당을, 10관 4담당관 40과 216담당으로 기구를 변경한다.

특히 현재 보도총괄계, 보도지원계, 홍보기획계, 영상홍보계, 뉴미디어계등 5개계와 기획홍보TF 등 6개 기구로 구성·운영되는 대변인실을 홍보총괄계, 보도지원계, 영상홍보계 등 3개계로 축소한다.

광주시 대변인실이 3개계로 운영되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작은 규모다.

공무원 정원은 집행부는 2007명에서 2006명으로 1명 줄이고, 시의회는 62명에서 63명으로 1명 늘린다.

이와 관련, 행자위원회는 지난 15일 소속 의원 간담회를 열어 조직개편안 심의 방향 등을 논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일부 의원은 졸속 개편안이라며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해 조직개편안이 통과될 때까지 진통도 예상된다.

주경님 행자위원장은 "지난 10일 조직개편안이 의회에 넘어왔기 때문에 검토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행자위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들도 조직개편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에 따라 "조직개편안이 인수위의 의견만 수렴되고, 집행부 실무관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산업건설위원회와 환경복지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행자위원들 간담회를 갖고 최종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집행부에 개진해 조직개편안이 수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행자위원인 조오섭 의원은 "윤장현 당선인 인수위가 조직개편안을 짤 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어긋나는 줄도 모르고 참여혁신단과 사회통합추진단, 인권평화협력관을 시장 직속으로 뒀다가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변경한 것은 그만큼 조직개편안이 졸속으로 짜였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윤장현 시장이 강조하는 '소통 철학'이 조직개편안에 반영됐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조직개편안 심의과정에서 윤장현 시장과 시의원들 간 기싸움도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조직개편안 심의과정이 앞으로 윤장현 시장과 시의원들 간 관계설정에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기자 노트

윤장현 시장 소통 막는 공무원

박 진 표
정치부기자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원과의 대화'에서 뺐습니다.〈광주시 총무과〉"

시민운동가 출신인 윤장현 광주시장은 연일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사회는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된 듯 하다.

윤 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직원과 '소통'을 위해 직접 대화하고 싶다며 '직원과의 대화'시간을 마련했지만 되레 '불통'의 상황에 직면했다.

시청 본청 중심으로만 일정을 짜고, 사업소와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등 이른바 본청 외 기타 기관이나 조직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직원을 배제한 것이 발단이 됐다.

배제된 직원들 사이에선 '민선 6기에도 또 차별이냐'는 불만과 함께 '시민시장'의 진정성까지 의심하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소외되고 어려운 곳부터 우선 돌보겠다던 '시민시장'의 시정철학이 내부행사에서도 실천되지 않고 있어서다.

이런 분위기를 몰랐던 윤 시장은 관용차량이 5부제에 걸린 지난 11일 지하철을 탔다가 한 직원으로부터 항의까지 받았다.

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운천역에서 내려 도보로 출근하던 중 사업소 직원한테 항의를 받았다. 직원과의 대화가 본청직원만 대상이었다는 것을 오늘에야 알게 됐다. 낮은대로 내려오는 것이 소통의 첫걸음인 것을 깨우친 출근길이었다"고 고백했다.

윤 시장은 이날 '직원과의 대화' 대상을 확대하라는 추가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윤 시장이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후 수십 곳의 사업소 중 시 본청 건물에 있는 종합건설본부 등 2곳만 대화대상에 추가되는 영광(?)을 안았다.

결과적으로 또 한번 본청 외 사업소는 물론 윤 시장이 취임 전부터 신분 등 제도적 개선을 지시한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은 시장과 대화할 기회마저 박탈당한 신세가 된 것이다. 사실 시청에서 이들만큼 시장에게 호소하고 싶은 사연이 많은 직원도 없을 텐데 말이다.

하지만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배제했다는 게 담당부서의 답변이다.

오히려 지난 4일부터 진행중인 '직원과의 대화'때마다 사진·보도자료 등을 통해 윤 시장님께서 '아이스크림을 사주셨다', '(값싼)철제의자에 앉아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신다', '하위직을 위해 간부배석을 금지하셨다'는 등 갖은 미사어구를 동원해 행사를 포장하느라 여념없는 모습이다. '시민시장'과는 어울리지 않게 염불보다 잿밥에만 마음이 있는 과장된 홍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행사명칭을 '본청 공무원과의 대화'로 바꾸라고 주장한 한 직원의 자조섞인 말이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이유다. 윤 시장이 강조한 소통은커녕 불통도 이런 불통이 없다는 생각마저 겹친다.

'소통'과 관련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8월 어느 행사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사람은 소통하며 살아야 한다. 지배하는 사람도 있고 지배받는 사람도 있는데 내 희망은 이 차이가 작아지는 것이다.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받는 사람 사이에 가장 큰 단절은 소통이 안 되는 것이다." /lucky@kwangju.co.kr

오늘 판문점서 인천 아시안게임 남북 실무접촉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인천 아시안게임 참여와 관련된 구체적 문제를 논의할 남북 실무접촉이 17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다.

우리측에서는 권경상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 3명이, 북측에서는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 3명이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실무접촉에서 북측은 최근 '평화공세'의 연장선에서 적극적 대남 제의를 해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북한이 선수단 공동 입장, 공동응원단 구성, 일부 종목의 단일팀 구성 등을 제안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북측이 민족 화합을 명분 삼아 상당히 공세적 태도로 나올 수 있다"며 "그렇지만 우리측에서는 이미 밝혔듯이 단일팀 구성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공동 응원도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애초 선수단 150여명을 참가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지만 최근 들어 비공식 경로로 조직위원회에 선수단을 더 보내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 밖에 이번 접촉에서는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이동 방식 등도 논의된다.

북한 응원단이 숙소를 겸할 수 있는 만경봉호를 타고 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북측 선수단 또는 응원단이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서해 직항로를 이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일각에서 논란이 된 북한 응원단의 체류 비용은 일단 북한의 뜻을 들어보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학생들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16일 오후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 경험없는 초보의원들 교육청 감시 제대로 할까

시도의회 교육위 구성 완료

모두 일반의원들로 채워져

광주·전남 시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상임위 소속 의원 구성을 마치고 활동에 들어갔다.

새로 교육위에 들어 온 의원들이 대부분인 만큼 의욕적인 의정 활동에 대한 기대가 많지만 교육의원제 폐지로 상임위 활동의 전문성 하락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16일 광주·전남 시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소속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의 위원장과 교육위원들을 선출했다. 교육의원 일몰제로 교육의원이 폐지됨에 따라 이번 교육위원들은 모두 일반 시·도의원들로 채워졌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위원장에 유정심 의원이, 위원에는 김영남·김옥자·문상필·이은방 의원으로 구성됐다. 전남도의회는 김탁 의원을 위원장으로, 강정일·김옥기·이경미·이장석·이혜자·임영수·임용수·한택희 의원이 교육위에 참여했다.

시의회는 유정심 위원장과 김옥자 의원이 초선이며, 도의회는 김탁 위원장과 김옥기·이장석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초선이다.

교육위 활동에 대한 의회 안팎과 지역사회의 관심이 큰 데다 대부분 교육위 활동이 처음이어서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도교육청 행정국장 출신인 한택희 도의원이나 6대 의회에서 교육위 간사를 역임한 이은방 시의원, 현재 학교운영위원장을 맡은 김영남 시의원의 활동도 주목된다.

그러나 교사 출신이 많았던 교육의원들이 의회에서 사라지면서 시·도교육청을 견제하고 감시할 교육위원들의 능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광주지역 교육단체의 한 관계자는 "현장 경험이 없는 의원들이 많아 학교, 학부모, 교육청 사이를 어떻게 이어주고 풀어줄지 걱정이 많다"고 전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낙연 전남지사, 직원과 소통 물꼬

오늘부터 과별 간담회 의견 청취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도정 운영 방향의 최우선 과제인 소통을 위해 17일 경제 관련 부서를 시작으로 직원과의 간담회를 갖는다. 간담회는 17일 창조과학과와 기업유치과, 21일 농업정책과와 해양항만과가 예정돼 있다.

직원과의 간담회는 민선 6기 도정 비전과 철학을 도청 공직자와 함께 공유하고 공직자의 생각과 의견을 청취해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지사는 틀에 짜인 업무보고 형식을 벗어나 직원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공직자들에게 자존, 헌신, 도전을 주문하고 공직자와 함께 즐거운 변화, 부드러운 혁신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지사는 간담회를 통해 "도정 혁신은 공직자로부터 출발한다"며 "공직자들이 전남의 운명을 내가 책임진다는 자존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주문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